

# KLTA NEWS + 2012 Spring

## 임업인들 정책자금 지원받기 쉬워졌다

지원규모 대폭 늘고 각종 규제도 완화...사업  
별 융자비율은 80%로 상향

올해부터는 전업농·수산업 종사자도 산림경영을 위한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지난해까지와는 달리 100ha 이상의 산림을 소유한 전문 임업인도 임야를 더 매입할 수 있다.

산림청(청장 이돈구)은 이와 함께 올해 산림정책 자금 지원규모를 906억원으로 대폭 늘리고 이를 집행할 때의 각종 규제사항을 폐지하는 등 산림정책자금 지원규정을 완화했다. 그동안 산림 경영인들을 위해 조림 및 숲가꾸기, 임도시설, 단기산림소득사업 등 17개 산림사업에 대해 장기(5~35년)·저리(1.5~4.0%)로 정책자금을 지원해 왔지만 올해부터는 이를 더욱 완화한 것이다.

산림청은 이를 위해 전업적 농업·수산업 종사자나 기타 직업을 갖고 소득 3,000만 원 이상인 자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던 조항을 폐지했다. 또 전문 임업인이 임야를 매입할 경우의 준보전산지 편입비율을 50% 이하로 완화하면서 100ha 이하의 산림소유자만 매입이 가능했던 면적제한 규정도 폐지했다. 사업별 융자비율은 70%에서 80%로 상향 조정됐다.

## 전국숲길 하나로 묶는 숲길네트워크 만든다

10년간 1조3천억원 투입, '숲길기본계획'추진...국가숲길 등 지정·운영

올해부터 10년에 걸쳐 전국 숲길이 하나의 축으

로 연결하는 숲길네트워크가 구축되고 생태·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숲길이 국가숲길로 지정·관리된다. 또 숲길이 등산로, 트레킹길(둘레길과 트레일), 레저스포츠길, 탐방로, 휴양·치유숲길 등으로 구분돼 운영된다.

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숲길의 조성·관리 기본계획(약칭 숲길기본계획)'을 올해 실행 착수해 2021년까지 추진한다. 지난해 개정된 '산림 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숲길기본계획 실행에는 10년 동안 1조3000억원이 들어갈 예정이다.

전국 숲길네트워크는 국가숲길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조성·운영하는 지역숲길을 연계한 형태로 구축된다. 국가숲길은 백두대간, DMZ, 서부종단, 남부종단, 낙동정맥 등 5대 트레일과 설악산 속리산 덕유산 지리산 한라산 등 5개 명산을 기본 축으로 해 만들어진다. 지역숲길은 각 지자체가 생활권을 중심으로 지역 특성에 맞고 국가숲길과 연계성이 확보되도록 조성 관리한다.

## 도시 생활권 수목(樹木) 건강진료 체계 구축

전국 국·공립 나무병원 13곳, 1월 12일 일제 개원

아파트 등 생활권 수목피해도 전문가가 진료하도록 하는 법률이 시행된다.

산림청(청장 이돈구)은 생활권에서 발생하는 수목피해도 나무병원에서 전문적으로 진단·치료하도록 하기 위해 지난해 7월 14일 "산림보호법"을 개정·공포하였고,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산림청이 지난 2010년 한국수목보호협회에 의뢰해 수행한 '생활권 녹지의 산림병해충 관리실태 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내 51개 아파트 단지에서 1년간 422회 농약이 뿌려졌고, 이 가운데 56.4%가 메티다티온, 이피엔 등 고독성 농약이었다. 보고서는 90% 이상을 수목진료에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 소득업체가 수행하는 것이 원인이라며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진단하였다.

이에 따라 법률에는 산림뿐만 아니라 생활권 녹지에서 발생하는 수목피해도 나무병원에서 전문적으로 진단·치료하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정부에서 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다. 산림청은 금년부터 생활권 수목방제기준 마련, 수목진료 전문인력 양성, 수목진료 기술개발·보급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수목진료시책을 마련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 시책의 일환으로 산림청이 재정지원을 하는 국·공립나무병원 10개소, 수목진단센터 3개소가 오늘 전국적으로 동시에 개원식을 개최하고 진료를 시작하였다. 앞으로 나무가 아프면 국립산림과학원과 9개 도 소속 산림전문 연구기관에 설치된 국·공립나무병원, 권역별 3개 대학(서울대학교, 강원대학교, 충북대학교)에 설치된 수목진단센터를 통해 전문적인 수목진단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산림청은 앞으로 시·도별로 공립나무병원 16곳, 센터 16곳을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가로수, 더 심어야 하지만 조성방법은 개선돼야**  
**가로수 국민의식조사, 대부분 "실생활에 꼭 필요...가로숲 녹지형태가 좋아"**

우리 국민 대부분은 실생활에서 가로수가 필요하

다고 생각하지만 현재의 가로수 조성방식을 바꿔 가로숲 형태의 녹지공간을 더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산림청(청장 이돈구)이 지난해 12월 전국의 20세 이상 국민 1300명과 지자체 가로수 업무담당 공무원 2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의식조사에서 밝혀졌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7.5%가 실생활에서 가로수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70.6%는 앞으로도 가로수가 더 많이 조성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현재의 가로수 조성·관리 상태에는 응답자의 15.8%만이 만족한다고 응답, 만족도가 낮았다. 그 대신 응답자의 80.3%는 기존의 가로수 조성방법과는 달리 가로수 사이를 녹지로 연결하는 가로숲 형태의 녹지공원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가로수 수종선정에 대해서는 67.2%가 문제가 있다고 봤는데 그 이유로는 "지역특성과 환경요인을 파악하지 않았다"(54.0%)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았다"(15.8%) 등이 꼽혔다. 이는 같은 조사에서 응답자의 54%가 가로수 수종 선정을 지자체 담당공무원이 결정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앞으로 가로수 수종을 선정할 때 해당 전문가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전깃줄(電線)과 가로수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서는 공무원은 가로수가 더 중요하다는 의견(78.7%)이었지만 일반국민은 전선(43.3%)이 가로수(39.2%)보다 더 중요하다고 답했다. 은행나무 가로수에 대해서는 공무원은 11.9%만 부정적으로 답한 반면, 일반국민은 29.8%가 부정적으로 응답하는 등 국민과 가로수 담당 지자체 공무원간에 의견차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